

#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과 정보사회

정보화 사회의 정치·사회·문화·법 등 각론 담은 책들

전자구적 문명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관한 담론들이 그 이론적·실천적 지평을 더욱 확대·심화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공산권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적 세계질서의 도래, 범세계적 자본주의화, 국가간 경쟁의 격화,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및 세계 각국의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등과 같은 거시적 변화들이 맞물린 채 정보사회에 대한 탐구 또한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보화 사회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하드웨어에 치중된 기술적 논의나 장미빛 수사로 가득찬 미래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지만(본지 222호 백옥인, <사회변화이끄는 정보화와 사이버스페이스> 참조), 최근 출간되고 있는 책들은 정보화 사회에 관한 고전적 이론을 토대로 하여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분석한 각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 정보화 사회에 대한 총괄적 분석

정보사회학회에서 엮은 《정보사회의 이해》(나남출판)는 정보사회에 관한 주요한 쟁점과 주장을 산업·직업·노동·가정·정치·소비생활 등 우리의 다양한 현실변화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나름의 정보화 담론을 꾸며보려는 시도다. <정보사회:이론적 전망>에서 김원동 교수(강원대)는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연속으로 보는 입장과 단절로 보는 입장을 소개하면서, "정보사회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틀 속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도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과 자본주의적 병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확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정보사회가 일과 노동세계에 끼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살피고 있는 <정보사회의 일과 노동>에서 김미숙 교수(청주대)는 정보기술의 도래는 업무의 효율성·자율성을 유연하게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실업이나 고용불안의 만연, 그리고 강화된 감시나 통제로 인한 노동 소외감의 고조 등도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정보사회의 노동세계 역시 인간이 의도적·주체적으로 고안한 사회유형의 결과물이므로 사회질서에 휘둘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충고한다.

## 지금까지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가 주로 기술적이거나

수사로 가득찬 미래를 그린

내용이었다면, 최근의 책들은

고전적 이론을 토대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분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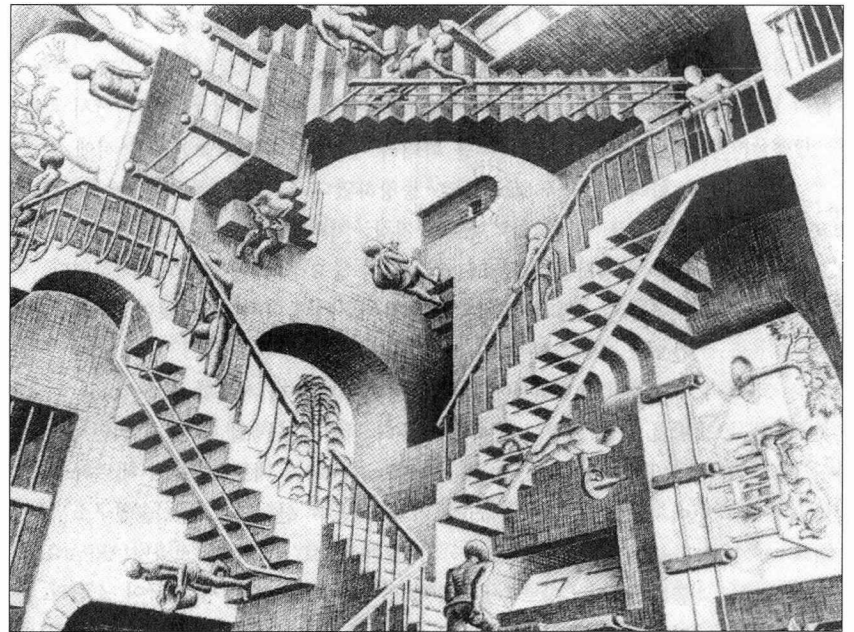
각론적 성격을 띤다.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론적 쟁점 중의 하나는 누구를 위한 정보화인가 하는 주제를 둘러싸고 제기된다.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는 학자들은 정보화를 통해 사회적 생산력과 효율성이 경이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경제적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사회적 개입을 통해 정보화가 올바르게 견인되지 않으면 정보화는 전자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프라이버시와 자유의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서강대 강정인 교수의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민주주의》(문학고지성사)는 새로운 정보기술이 세계를 민주화하는 데 전혀 없는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에 못지 않게 테크노크라트와 정치엘리트에 의한 전체주의적인 체제의 출현 위험 역시 증대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컴퓨터나 새로운 전자통신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변화와 정치질서의 재편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비판이 요구되며, 시민들 스스로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사회적 변화나 정치질서의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숙의와 실천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보사회의 발달은 법과 제도의 변화도 가져온다. 그것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직접 국정에 관한 사항을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알 권리의 제도화로 나타나지만, 한편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됨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위협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개별적 기본권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성낙인 교수(영남대)의 《언론정보법》(나



에서 작 <상대성(Relativity)>. 일상적 공간의 수학적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정보공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남출판)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알 권리에서 비롯된 정보공개법,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등을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저자는 정보사회의 법적 대응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공개법이 자칫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보사회에서 정보의 소유·공유·이용과 정보의 보호는 동시에 추구되고 유지되어야 할 가치이자 권리라고 역설한다.

## 정보 기술의 우월한 미래

정보기술의 미래는 흔히 SF적 상상력에 의한 충격적 영상으로 표현되어왔다. 사이버그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과 복제력을 직설적으로 그려낸 <터미네이터2>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인공지능의 고뇌를 통해 미래 인류가 테크놀로지에 의해 저지르는 가치기준의 혼돈을 묵시론적인 영상에 담은 <블레이드 러너> 등은 그 대표적 사례다. <사이보그, 사이버컬처>(문화과학, 홍성태 엮음)는 "정보기술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 차이와 차별이 사라진 '멋진 신세계' 일까? 아니면 기계적 동일성이 지배하는 사이버그의 세계는 아닐까?"라는 본질적 의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케빈 로빈스와 레스 레비도우는 <병사, 사이버그, 시민>에서 영상과 이미지 기술이 사이버그 자아의 구성을 매개한다는 점을 걸프전을 들어 설명한다. 이 전쟁에서 병사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통해 사이버그-병사로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 무기체계의 일부로

프로그램화되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군사적 사이버그와 사회적 사이버그의 구성에 관한 이들의 주장은 사이버 문화의 그늘을 들춰보인다.

한편, 극소전자혁명은 글쓰기의 기술적, 미학적 형식까지도 변형하고 있다. 지난 8일 <뉴욕타임스>지는 단 한권의 책에 문자 발명 뒤 저술된 인류의 모든 책을 담을 수 있는 '최후의 책'이 등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종이책과 인쇄매체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빌렘 플루서의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문예출판사)는 문자와 글쓰기 행위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문자와 글쓰기, 그리고 인간의 사고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변화될 가능성을 논의한다.

이 책은 우리 문화가 문자와 글쓰기로 이루어진 휴머니즘과 '구텐베르크적 문화'로부터 컴퓨터와 디지털 코드로 대변되는 소위 '텔레마틱적 문화'로 이행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지녔던 사고방식과 가치(가령 서구의 낡은 휴머니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플루서의 다음 말은 정보화 사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성찰로 들린다. "다가오는 사회에는 두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다. 미래는 나치하의 독일이 그랬던 것보다도 더 정도가 심한 전체주의 사회로 되든가, 아니면 완전히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된다." 즉 미래에는 디지털적 야만과 유토피아의 두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이다.

— 박천홍 기자